

인터넷신문의 저널리즘 품질과 공적 책임 문제 심각

포털의 인터넷언론 검색제휴 심사, 제3의 독립 외부 위원회에 맡겨야



지난 2월 1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인터넷신문위원회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있었던 ‘인터넷신문윤리와 뉴스이용자 권익증진 토론회’에서 이민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포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인터넷언론종사자는 전문언론인이라기보다는 기사 양산의 기능인 역할 밖에 안 된다”며 저널리즘 정체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인터넷신문 자율규제와 뉴스이용자 권익증진 연구:포털 검색제휴 외부심사기능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아래 발표를 한 이 교수는 “현재 인터넷은 올바르게 접근하지 못한 목적과 왜곡된 정보를 유통하고, 아무런 법적 의무와 책임이 동반되지 않고 사회계약에만 의존하는 무규제 공간으로 전락했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인허가와 진입장벽이 자유로운 인터넷공간에서 5천여 개의 인터넷신문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포털의 지배력과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인터넷신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포털과 인터넷신문을 둘러싼 인터넷 자율규제 방법과 지원 모델을 모색하는 한편, 인터넷신문 규제 모델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3년 말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4916종에 이른다. 전체 정기간행물 수에서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비율도 이미 30%를 넘어섰다. 그러나 인터넷신문의 90.9%가 10인 이하의 사업체로, 전체 사업체의 54.5%가 매출액 1억 미만, 97.5%는 매출액 10억 미만으로 경영 구조가 열악한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인터넷신문이

양적으로는 큰 폭으로 성장했으나, 저널리즘 품질과 언론사로서의 공적 책임에 관한 비판은 날로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포털의 실시간 검색에 맞춰 같은 내용의 기사를 중복 재전송하는 어뷰징 문제,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트래픽 유발을 위해 낚시성 제목, 광고성 기사, 기사의 품질 저하, 선정적 광고 등을 서슴치 않는 행위 등 인터넷신문의 문제점은 계속 확대, 증가되고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인터넷신문위원회에서 기사심의를 하고는 있으나 5000여개의 매체중 108개 매체만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 자발적 참여 언론사 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실효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교수는 “포털에 의존하는 인터넷신문종사자는 전문언론인이라기보다는 기사 양산의 기능인 역할밖에 안 되는 현실에서 저널리즘 정체성의 문제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진입규제의 일환으로 등록제를 강화하거나, 뉴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포털사업자를 규제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다. 현재 포털에 과도하게 집중된 언론의 기능인 기사편집과 배열, 검색제휴, 기사노출 알고리즘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따른 분산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포털의 일명 ‘가두리방식’으로 비난받는 폐쇄적 서비스 운영의 문제점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민규 교수는 “그동안 포털 내부에서 폐쇄적으로 진행된 인터넷언론과의 검색제휴 심사 기능을 제3의 독립적 외부 위원회에서 투명하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KA A**

이수지 susie@kaa.or.kr